

[종합·해설]

“문광위, 문화수도조성위 지켜라”

신당 심의 부결키로…폐지 위기 넘길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폐지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를 국회에서 지킬 수 있을까.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예측할 경우, 일단은 폐지 위기를 무사히 넘길 가능성이 크다. 조성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관광위원회 내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법제사법

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조성위 폐지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첫 단계인 문광위 통과도 어려운 것이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다.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문광위를 통과하면 전체 24명의 과반인 1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은 중대통합민주당이 12명, 한나라당 10명, 민주노동당 1명, 민주당 1명 등이다.

특히 위원장이 조제숙 의원으로 신당 소속이다. 신당 층 의원의 배신이나 반란이 없을 경우에는 통과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문화도시 특별법 개정

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임시국회가 17대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 커서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 지병문 의원은 “문광위에서 수적으로 우위에 있고 신당 의원들 사이에는 문화도시 조성위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문광위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신당은 ‘조성위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광주·전남의원 간담회에서 “통일부·농업진흥청·문화도시조성위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신당의 확실한 달론”이라며 “문화도시조성위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어에 팔 걷어붙인 李 당선인

인수위 로드맵에 ‘힘싣기’… 인수위 회의서 작심한 듯 개혁의지 쏟아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영어 공교육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비풀어진 영어 교육의 틀을 제대로 고려하는 취지의 새 정부의 영어 공교육 로드맵이 교육계 일각의 저항과 정치적 공방 속에서 자자 초장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듯 하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오전 간사단 회의에 직접 나와 ‘작심한 듯’ 영어 공교육에 대한 소신과 강도높은 개혁의지를 쏟아냈다.

이 당선인은 회의에서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로드맵이 정확한 좌표설정이며 교육계의 반대론은 개혁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규정하면서 인수위에 확실한 힘을 실어줬다.

이 당선인은 “옳은 방향이다. 방향은 인수위가 맞다”고 언어로 강조하며 “반대와 저항은 으로 있다.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이해를 못해 반대하는 사람은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반대론을 ‘고속도로상의 역주

행’으로까지 비유하며 인수위가 좌우면하지 말고 당초의 방향대로 밀고 나가라고 ‘독전’했다.

이어 이 당선인은 “오늘 우리 인수위에서 만드는 영어 공교육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반대”라며 “정치쟁점화해서는 안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다만 ▲노원구 조등학교 영어수업 ▲전남 신안군 영어 인터넷 과외의 현장사례를 거론하며 세밀한 보완대책도 주문했다.

노원구 초등학교 사례는 학생이 30~40명에 불과한 한 반에서도 실력과 수준차이가 나는 현실인 만큼 방과 후 또는 방학을 활용해 차등화된 교육을 준비해보라는 메시지였다.

전남 신안군 사례의 경우 농·어촌 등 영어 취약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주문사항이었다. 강남구에서 쓰는 영어 인터넷 과외 방식을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활용한 결과 반응이 좋았다는 점을 거론했다.

/연합뉴스

지역 환경·시민단체 호남운하 반대 서한

광주·전남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지난달 31일 새 정부가 추진할 영산강 호남운하에 반대하며 ‘영산강 호남운하저지 광주·전남시민행동(가)’를 결성하고 운행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 YMCA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호남운하저지 시민행동(가)’는 이날 영산강 호남운하 반대 성명을 담은 서한문을 대통령 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호남운하저지 시민행동(가)’은 서한문을 통해

“지리적 여건상 운하는 맞지 않고 물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파탄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호남운하 사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운하건설사업은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만큼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이 이뤄져선 안되며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한반도 대운하, 영산강운하에 대한 종합적 타당성 검토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혁 기자 golee@kwangju.co.kr

추당선인 거론 신안 사이버 학습은



섬지역 학생들 위한 인터넷 원격 시스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영어 공교육 현장사례로 언급한 신안의 ‘섬드리 하나로 사이버 등대교실’(이하 등대교실·사진)은 섬이 많은 신안의 지역적 특성을 복제하기 위한 인터넷 상의 학습 공간이다.

신안교육청은 서울지역의 자체적인 인터넷 강의를 비롯한 상방 소통이 가능한 원격수업을 홈페이지에 담겨 학생들로부터 이용토록 하고 있다. 신안은 14개 섬에 41개 학교가 산재돼 있다.

학생들은 등대교실에서 영어, 과학영재교실, 가정학습, 방과 후 학교, 소규모학교 협동학습, 사이버 서당 등을 이용하게 된다. 교사들은 과목별로 각종 콘텐츠를 개발해 매년 300개 정도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천500여명의 신안지역 학생들이 등대교실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사이버 학습에 도내 2천114개 학급 18만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한나라당 공천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오후 여의도 당시에서 열린 공심위 회의에서 김애실 의원(면원쪽)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심위 “김무성 공천 심사”朴 측 “상황 변화 없다”

한나라 공천갈등 봉합?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의 권유를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는 불만 수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어 공천갈등이 수습될지 미지수다.

공심위는 이날 여의도 당시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부패전력자 공천신청 불허 당규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공천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

기로 했다”고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제1사무부총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공심위의 이날 결정은 당규 3조2항의 해석에 대해 당내에서 여러 견해가 있는 만큼 탄력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당 최고위원회의의 찰조 의견을 공심위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해당 당규를 원칙대로 적용하기로 한 제3차 공심위 회의 결과, 공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친박(친 박근혜 전 대표) 계좌 김무성 최고위원은 일단 공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친박계 의원들 중 상당수는 이날 공심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화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내 공천갈등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생 3막’ 정치, 두렵지만 자신있다”

오늘 퇴임하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지난 광주의 미래를 열겠다는 열정으로 극복할 생각이다.

—지방대 출신으로

중앙부처에서 성공한 비결은.

▲인생의 3막 1장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분이다.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보낸 30여년이 인생의 1막이 있다면, 지난 75년부터 시작한 33년동안의 공직생활이 2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인생 3막’인 정

치관 도전을 앞두고 두려움도 있

—정부 장관을 지내며 기억에 남은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은.

▲우선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호남고속철도 조

기 개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기억에 남는다. 광산구에 위치한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백방으로 뛰던 기억도 새롭다.

—광주·전남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

▲광주·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역 총생산과 재정자립도 등이 최하위권을 막고 있다. 특히,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호남 고립의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이제, 정·관계는 물론 학계, 산업체 인사들이 지역 현안을 국가적 사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원 10주년 기념 2월 1일 시작반 특별이벤트

공인증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률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률 예약합니다!

전남고시학원 236-2467~8

공인증개사 전문학원

제10회 공인증개사시험 시험관 한국 수석 2명 배출(한국인 1명, 외국인 1명)

개강 2월 1일

“동영상 무료” 국비무료

내총행정고시학원

바이오싱크케어

세포 분석 플랫폼 기반의 바이오 분석 플랫폼

세포 분석 기기, 리얼ไท머

세포 분석 기기, 리얼ไท머

건물 매각

건물 매각